

〈제 699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신세계

#### ◆ 순환자원 수거기 '네프론' 도입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본관 지하1층 연결통로에 인공지능 순환자원 수거기 '네프론' 1대를 지난달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네프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원을 선별적으로 수거하는 기능을 갖춘 회수로봇으로, 깨끗하게 세척된 투명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이용자에게

개당 1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금은 수퍼빈 홈페이지나 앱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2천포인트 이상부터)으로 환급 가능하다. 또한 수거한 페트병과 캔은 새로운 자원(섬유 또는 비행기의 날개)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네프론을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과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을 알리는 등 재활용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광주은행

#### ◆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동구 대인시장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쳐온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대형마트에 익숙해진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물건을 직접 구입하고 계산하도록 구성한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그램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대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필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은 재미와 경제 공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금호타이어

#### ◆ 공장 인근 주민에 제수용품 전달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곡성공장 인근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의 이웃사랑 캠페인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이웃들에게 제수용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번에도 200명에게 전달될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마련해 광산구청, 광산구 어룡동 주민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에 전달했으며, 해당 물품들은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 기아AutoLand광주

#### ◆ 추석맞이 ‘정 나누기’



기아AutoLand광주는 지난 7일 추석을 맞이해 지역사회 독거노인들과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한 후원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 남구청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강명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박래석 광주공장장이 참석해 지역사회에 명절의 정을 전하고, 기아 광주공장은 독거노인들에게 드릴 '정 나누기 꾸러미' 제작을 위한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정 나누기 꾸러미'는 상차림세트, 쌀, 한과, 김치로 구성됐으며 남구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독거노인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 광주상생일자리재단

### ◆ 광주지역 택시 경제위기 극복 '노사협력'



광주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동찬)은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노동조합 및 광주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전택노련광주본부)과 지역 택시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내용은 △노동조합은 안전 수칙 준수 및 친절한 언행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회사는 윤리경영

실천 및 근로조건 개선 △재단은 노사상생 파트너십 구축 지원 및 상생의 환경조성 등이다.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노사가 손을 맞잡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은 지역 택시 서비스 질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남일보

오피니언

19

### 경제칼럼

## 향토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자

박성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며칠 전 지인들과 영남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마침 점심때가 되면서 마산항에 있는 조그만 식당을 찾아가게 됐다. 식사 주문을 하며 소주를 달라고 했더니 망설임도 없이 주인아주머니가 지역기업의 소주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왜 소주의 이름을 묻지도 않느냐?'고 했더니 그분은 당당히 '여기가 마산 아닙니까?' 라고 답변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이번에는 해운대 송정 해변의 식당을 들러 주문을 했는데, 여직원이 어김없이 부산기업 소주를 내놓은 것이다.

얼마 전 서귀포 출장길에서 식당에 갔다가 똑같이 제주기업 소주를 마시게 된 경우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남도의 음식점에서 출대받고 있는 향토기업 소주의 현실에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필자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우리 남도인들은 대개 공감할 것이다. 광주·전남의 식당에 들어가 소주 달라고 하면 지역 제품이 아닌 서울의 소주를 갖고 나오는 사례가 아주 많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술을 시킬 때는 꼭 지역기업 소주 브랜드를 기

억했다가 잊지 않고 주문하자'고 주위 분들에게 말하곤 했다. 종종 다른 지역의 술을 들고 나올 때마다 우리 고장 제품으로 바뀌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단골식당에 가면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게 됐다. 알아서 자랑스럽게 들고 온다. 다만 몇몇 직원들에게는 진상으로 낙인찍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말한다. 소주를 생산하는 지역기업이 투자에 인색하고 마케팅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에만 쉽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나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생산품들이 어느 세월에 경쟁력을 제대로 키워갈 수가 있을까? 물량 공세를 펴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는 주류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에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먼저 사 마셔 주는 주민들이 많기에 힘든 여건에서도 분투하며 깨끗하게 힘을 키워가는 지역 소주 업체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말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지역기업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사줘야 한다.

그래야만 매출액이 늘고 향토기업의 일자리가 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식들 또한 가족과 함께 남아서 고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지 않겠는가?

지난 8월 광주 상무공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우리 지역기업 바로 알기' 대회로 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고용노동청, 한국광산업진흥회 그리고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이 만든 자리였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참가자들이 적어 아쉬웠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꿈나무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기업을 바로 알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함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공모전에 시도민들이 UCC, 슬로건, 포스터, 자유수필과 수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응모를 했다. 작품내용을 살펴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참 많았다. 이를테면 '중소기업은 중요하고 소중해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영산강이다' '중소기업 자란다! 잘한다!'고 하는 이들 주장이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물건을 사면 제일 먼저 생산지 주소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고장에서 만든 상품이면 우선 반가워 톡톡히 보면서 가성비까지 따져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잘 팔리겠는가 싶어서 말이다. 이번 추석명절에도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고 있지만 고향상품보다는 온라인에서 편히 구입한 타지역 생선품을 선택한 경우들이 많다. 특히 대형마트에 가보면 가격경쟁력에 밀려 농수산업이 주력인 우리 남도의 생산품마저 밀리고 있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가 봐야 한다.

인심이 후하고 농심이 살아 있는 동네시장 말이다. 최근 청년창업으로 개업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는 100년 전통의 양동시장에 젊은 세대들의 발걸음이 찾아지고 있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한가위에는 시설 현대화로 달라지고 있는 빛고을 곳곳의 전통시장을 가족과 함께 찾아나서 보자.

## II. 광주경충 소식

### 〈제1569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박정호(명지대 특임교수)

주제: 2022년 이후 본격화될 경제현상:양극화의 네가지 흐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9월2일 광주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를 초청 <2022년 이후 본격화될 경제현상:양극화의 네 가지 흐름에 >이란 주제로 제1569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0년 만에 가장 긴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최근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팬데믹 이후 시장에는 막대한 돈이 풀렸지만 생산성은 떨어진 상황이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했다. 각국 정부는 팬데믹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고 동시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팬데믹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급 병목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물가 상승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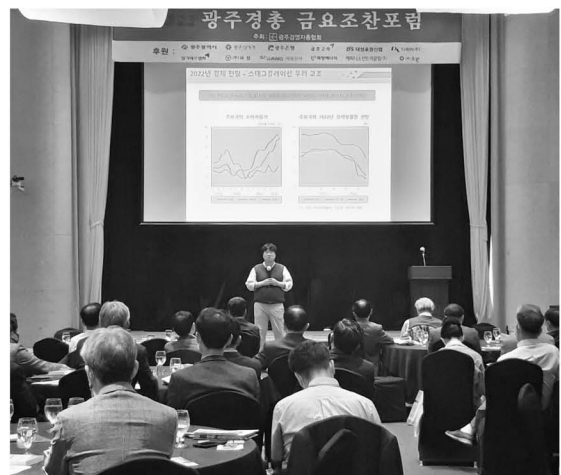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19 등 경제위기 뒤에는 항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개인간의 양극화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 충격을 받은 자영업자는 고금리업권의 대출을 늘리며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간의 양극화로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빈집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간의 양극화는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위기는 10년 이상의 역성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을 바라보는 시각변화로 유엔난민기구 등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14번째 인구 대국은 난민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40년간 자연재해는 3배 이상 급증하고 전세계 24억명이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하고 2050년 12억명이 기후 난민이 예상된다.

업종간의 양극화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급 진전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는 국가 현안 키워드를 정리하여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항상 위기 뒤에는 산업재편이 전개된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플랫폼 시대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다.



### 사무국 일지(9.5 ~ 9.8)

9.5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수행 기관 회의</li> <li>● 북구청 생활임금위원회 회의</li> </ul>	9.7 (수)	● '23년 산업전환지원센터 사업추진 회의
9.6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고용전략회의</li> </ul>		

## 1. 노사 동향

### ■ 고용부, 조선업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고용부는 9. 6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배규식 前 경사노위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식 노동 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 고용부는 ▲조선업 원·하청 구조개선 현장실사(8. 16 ~ 17), ▲장관 주재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8. 30),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 간담회 등을 개최해 조선업 원·하청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고용부는 향후 원·하청 노사, 학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의회’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

### ■ 양 노총, 정기국회 개회(9. 1)에 따른 입법촉구 활동 주력

○ 민주노총은 9. 1 정기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법 요구사항을 이슈화

- 민주노총은 8. 31, 9. 1 기자회견을 개최해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 노조법 개정을 요구

-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쟁의행위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선정한 만큼,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연대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하는 투쟁 전개 전망

○ 한국노총은 9. 5「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하반기 활동계획 및 ‘하반기 10대 입법추진 과제’ 의결

- 한국노총은 2022년 하반기 주요 활동으로 ▲위원장 회원조합 순회(9. 19 ~ 10. 21), ▲국정감사 투쟁(10월 中), ▲전국노동자대회(11. 5), ▲노동법 개정 저지 및 입법투쟁(12월 中)을 수립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또한 ‘10대 입법추진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요구해온 쟁점과(고용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공공부문 관련 정부정책 대응(공무직 차별개선, 공공부문 개혁 저지 등)을 확정

#### [참고] 한국노총 하반기 10대 입법추진 과제

①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철폐	⑥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리 보장
② 공무직 차별개선 및 신분보장	⑦ 노조법 전면 개정
③ 사업 이전 시 고용 승계 보장	⑧ 노동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 분쇄
④ 산업 전환기 고용보장	⑨ 상향식 연금개혁 실현
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저지

○ 한편, 한국노총은 9. 6 ~ 7 여야 보좌진 국정감사 현안 설명 간담회 개최

- 동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조합과 총연맹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현장 현안을 비롯해 ▲노동시간 유연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 정부 정책과 법·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불법행위 지속 및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이슈화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8. 16부터 하이트 진로 본사(서울)를 불법점거하고 옥상에서 고공농성 진행하는 가운데 9. 2 진보시민단체와 연대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해지 조합원 전원 재고용, 민·형사상 부제소, 손배 철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의 난항

○ 한편, 하반기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화물연대는 9. 3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결의대회 개최

※ 안전운임 : 화물의 품목·운송거리·크기 등을 고려한 표준운임

-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기(’22년 末)가 임박함에 따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선정한 만큼, 화물연대와 연대 가능성 증가

※ 더불어민주당은 8. 31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으며, ▲쟁의행위시 손해배상 제한(노란봉투법), ▲기초연금 인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이 포함됨.



## 2. 법제 동향

### ■ 윤미향 의원(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8.31)

- (발의 이유) 현행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 윤미향 의원(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8.31)

- (발의 이유) 현행법(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주요 내용)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정  
②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등 미조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 윤미향 의원(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9.1)

- (발의 이유) ① 현행법(노동조합법 제2조)상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지배력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② 현행법(노동조합법 제35조·제36조)은 단체협약 체결 시 사업장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구속력 확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산업·업종 단위에서 공통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구속력을 확장할 필요성 제기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주요 내용) ①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방법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
- ② 한 지역 또는 한 산업·업종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당해 지역 또는 산업·업종에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체협약 적용 가능

#### ■ 한정애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9.1)

- (발의 이유)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고용촉진 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 현행법(고용보험법 제26조)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상담 시설, 어린이집 등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 가능

- (주요 내용)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촉진시설의 이용 대상에 포함

#### ■ 양경숙 의원(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9.1)

- (발의 이유) ① 현행법상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 제기
  - ② 사용자의 손해 산정 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제기
  - ③ 현행법(노동조합법 제2조)상 사용자의 정의에 ‘간접고용 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지배력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폭력·파괴로 인한 손해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신청 불가능
  - ② ‘사용자의 영업손실’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 손해배상 청구 및 압류·가압류 신청 한도를 노동조합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까지로 한정
  - ③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소극적인 근로 제공의 거부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규정

④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⑤ 노동조합이 손해를 입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업 규모, 종속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

⑥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 ■ 우원식 의원(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9.6)

○ (발의 이유) 현행법(하도급법 제16조의2)상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등의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해 직접 협의 등을 할 수 있지만, 신청 요건이 복잡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①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

② 공급원가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